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91.31	↓ 코스닥	807.99
	(-24.00)		(-6.78)
↑ 금리 (미국 9년)	3.312	↑ 환율 (원·달러)	1330.80
	(+0.064)		(+8.20)



‘삼성물산 합병’ 적법성 확인… JY, 3년6개월 만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회장〉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법원 “공소사실 증명 할 수 없다
지배력 강화 유일 목적 아니며
주주손해 끼쳤다는 증거도 없어”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무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회장의 결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나란히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임직원 전원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사안 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방어하려 했다는 등 분식회계 등 혐의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20년부터 진행된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서 3년 6개월여만에 결백을 인정받게 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 대부분 참석하며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승계를 목적으로 한 문건 ‘프로젝트 G’를 만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지분이 많은 이 회장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관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검

찰은 기소 직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말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전현직 임직원에도 실형을 구형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주주에 피해를 끼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당할 몫이라며 임직원들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이 회장 손을 들었다. 프로젝트G가 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약탈적 승계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이 회장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으로,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양사 이사회를 거친 것도 정당한 절차였다는 근거로 들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성공 여부도 불확실했다며 의도적으로 콜옵션

을 숨겼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 검찰측은 일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이 당초부터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남아있는데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 이 회장 역할론이 각계에서 거론되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불법 합병 의혹을 법정에서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경영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 회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이 삼성물산 합병과 분식회계 등이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100% 녹지확보… 100층 친환경 수직도시 들어선다

서울시, 코레일·SH와 계획 수립
도심복합개발 혁신전략적용 첫 사례
고용 15만명, 생산효과 33조 기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약 50만㎡ 규모의 녹지가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30년 초에 입주할 시작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코레일·SH공사가 함께 마련했다. 사업부지 면적이 49만5000㎡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자금부족·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됐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만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다. 비온드 조닝,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심복합 개발을 위한 혁신 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다. 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 60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32조 6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이 도보권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콤팩트시티’ 구현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을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했다.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가 들어서는

중심부인 ‘국제업무존(8만8557㎡)’은 용도 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부여,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국제업무존에는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와 함께 마이스 시설,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아트랙션 등 복합놀이 공간을 설치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전체 사업 지구 평균 용적률이 900% 수준이 되도록 계획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업무복합존(10만4905㎡)’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R&D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해 서울의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한다. ‘업무지원존(9만5239㎡)’에는 주거·교육·문화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사업 부지면적과 맞먹는 규모의 녹지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역 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를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로 녹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용산역 남측 선로 상부에 들어서는 8만㎡ 크기의 ‘공중녹지(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으로 거듭난다. 폭 40m·연장 1km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사통팔달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만들어지고, ‘선형녹지(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행축 기능을 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망국적 발상” 비판

거대 양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위성정당 창당 준비 절차를 밟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5일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하자 제3지대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성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 경동시장 찾은 한동훈 “경기가 안좋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다”?
▲ 원희룡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1인 위한 선거제로 타락”
/사진 뉴시스

▲ 이준석 “위성정당, 입법 취지 맞게 할 것… 물리적으론 가능”
▲ 심야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 박근혜, 수감중 메모 공개… “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재선 도전 선언… “정부에 강한 국회의원”
/사진 뉴시스